

《지성과 반지성》, 그리고 기자협회장 시절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5

김병익 | 문학평론가

“1971년 봄의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다. 나는 미국의 역사학자 호프스태터의 저서를 읽다가 문득 우리 지식사회에 대한 가혹한 반성을 가하고 싶다는 충동이 불처럼 솟았다. 그래서 그날 밤 당시의 지식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반지성적’ 사례를 꼽고 ‘지성의 퇴화’ 현상을 비판한 글을 써내려 갔다. 이튿날, 필화가 염려돼 동인들에게 간밤에 쓰다 멈춘 그 원고를 돌려 읽히기까지 했으니, 그 에세이가 바로 <지성과 반지성>이었다.”

『한국문단사』를 연재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족쇄물린 현실에 대해 유달리 민감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간섭당하는 협장인 신문사의 기자였기 때문이고, 그것도 문화부에서 일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권력과 언론 사이의 억압적이고 살벌한 실제 장면들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즈음 박정희 정권은 채찍과 당근 정책을 써, 약간이나마 비판적인 기사나 논평을 하는 언론인은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연행해 겁을 주는 한편, 정부 부처에 대변인제를 도입해 기자들을 임용함으로써 신문사와 유착하도록 유인했다. 내가 <지성과 반지성>이란 글을 써서 지식사회 의 분열과 어용화 현상을 비판한 것은 이런 정황에서였다.

필화를 염려하며 쓴 <지성과 반지성>

1971년 봄의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다. 나는 미국의 역사학자 호프스태터가 쓴 풀리쳐상 수상도 서인 『미국인 생활에 있어서의 반지성론』을 읽다가 문득 우리 지식사회에 대한 가혹한 반성을 가하고 싶다는 충동이 불처럼 솟았다. 그래서 원고지를 잡고 대뜸 “우리의 이 시대는 고민이 없다. 우리의 이 사회는 고민을 용납하지도 않으며 고민에 투신하기보다 그로부터 가능한 멀리 회피하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이 풍토는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무엇을 고

민하는가에 대해 고백하지 않으며 왜 고민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설명하지 않는다”로 시작되는 글을 써내려갔다. 그 밤 원고지 20여 장을 쓰고 이튿날, 과연 이런 글이 발표돼도 탈이 없을까 걱정돼, 모여 앉은 동인들에게 간밤에 쓰다 멈춘 그 원고를 돌려 읽혔다. 동인들은 불안해하면서도 글이 이런 흐름이라면 필화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내려줬다.

이에 격려를 받은 나는 그 글을 계속 쓰면서 당시의 지식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반지성적’ 사례를 꼽고 ‘지성의 퇴화’ 현상을 비판했다. 그때 나는 ‘지성인’ (intellectual)을 원천적인 질문과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지식인’ (intelligent)을 기능적인 문제와 답을 모색하는 전문적 실용 능력으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그 에세이는 근원적인 회의와 저항을 하는 지성의 전통이 권력에 의해 와해돼가고 권력과 경제개발의 도구로 사용되는 어용 지식인의 세력이 커져가는 현실에 대한 나의 비판과 비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그 글은 『문학과 지성』 1971년 여름호에 발표됐고 친구들과 독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고 그 반응도 적극적이었는데, 한 친구는 ‘우리 시대의 명문’이라고 과찬하기까지 했다. 그 글의 비판이 지식인을 향한

것이었기에 ‘기관’에서도 눈을 돌린 듯 내가 위협당하는 일은 다행히 없었다. 일본의 『통일일보』도 전문을 번역해서 3회에 걸쳐 연재했다. 몇 년 후 재일 동포작가 김학영(金鶴泳)씨가 작품집 『のみ(鑿:끌)』(1978년 문예춘추사 간)를 내게 보내왔는데 몇 차례 아쿠다카와 상 후보에 오른 그였지만 나와는 면식이 없어서 왜 그가 자기 책을 보냈는지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읽을 줄 모르는 그 일본 책을 뒤적거려본즉 첫 수록 단편소설 〈あぶら蟬(기름매미)〉에 그 <지성과 반지성>을 길게 소개하고 있었다. 물론 그 소설의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나의 에세이를 평했는지 일어를 모르는 나는 지금껏 알지 못한다.

이 글을 계기로 해서 나는 지성, 지식인, 지적 풍토에 관련된 몇 편의 글을 더 쓰게 됐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가장 힘을 들인 것이 『지성』이란 월간 종합지에서 청탁받은 해방 이후의 한국 지성사 정리였다. 이청준이 주간으로 있던 이 잡지는 조선조 시대부터 시대에 따른 지식인 사회의 역사를 기획해 서기원, 김 현 등을 동원해서 몇 회 연재를 했는데, 내가 그 마지막을 맡은 것이었다. 나는 낮에는 회사 일을 끝내고 국립도서관이며 국립도서관에 가서 해방 공간기와 6·25 당시 및 전후 1950년대의 잡지와 책 등 갖가지 것들을 뒤지고 메모하고 빌리며 집에 돌아와서는 그것들을 자료로 원고를 썼다. 이렇게 하며 집필에만 1주일 남짓 걸려 마칠 수 있었던 것이 200자 원고지로 130장은 넘을 <지성의 형성과 패배>였다.

이 글에서 나는 해방 후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들이 반공주의로 위축됐으며 한국전쟁 후 기독교와 실존주의가 어떤 형태로 우리의 내면에 수용돼 4·19로 발전했는가를 검토했다. 그때 내가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실존주의가 이미 1940년대 말 월간 『신천지』에서 수준이 낮은 대로나마 특집으로 다뤄졌으며 실존이란 어휘는 1930년대에도 가령 박종홍 박사에 의해 사용됐

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다. 나는 실존주의가 6·25 이후에야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아무튼 내게 혹독한 공부를 시켰던 〈지성의 형성과 폐해〉는 《지성》1972년 3월호에 발표됐고 이 연재들은 문예출판사가 《한국의 지성》이란 표제로 문고판으로 간행했다.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선임되다

나는 시절이 너무 무기력하고 상황이 폐쇄적이라고 느낄수록 지성에 관련된 내 에세이를 책으로 묶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고 그 뜻을 민음사 박맹호 사장에게 표했다. 감성적인 수필류만이 팔리던 시절, 딱딱하고 따분한 나의 에세이 같은 것이 장사가 될 리 없음에도 나는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에게 뻔뻔스런 부탁을 했고 박 사장은 마침내 내 뜻을 받아줬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나의 첫 에세이집 《지성과 반지성》이었다. 4·6판 370여면의 이 책은 8포인트의 작은 활자로 세로조판됐고, 이중한의 품위있는 장정으로 1974년 9월 20일자로 발행됐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는 〈지성과 반지성〉 〈지성의 형성과 폐해〉 〈한국문화에서의 양극화 현상〉 등 6편을, 2부는 〈한국의 지적 풍토〉 〈교수·연구·연구비〉 등 지식 사회 전반을 훑는 글 8편, 3부는 〈한국문화와 외래어〉 〈한국 출판문화의 허구〉 등 지식사회의 구체적인 분야들을 해부하는 글 5편을 묶었다. 이 책의 반응도 기대만큼이었지만 판매도 이런 유의 에세이집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듯 싶은데, 1976년인가 아마 3쇄로 중판했을 때 문공부가 납본필증을 내주지 않아 의외의 ‘판금도서’가 돼버렸고 그래서 결국 절판되고 말았다. 그때의 내 짐작으로는 〈지성과 반지성〉에 언급된 한 사례에 관련된 인사가 뒤늦게 이 책의 유통을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 싶었다.

《지성과 반지성》이 출판된 지 한 달도 안돼 나는 뜻밖에 한국기자협회장이란 중책에 선출됐다. 이 과정은 좀더 설명돼야 할 것이다. 1974년 2월 동아일보사에서는 편집국과 동아방송 보도국 기자를 일반적으로 전출시킨 것에 항의해 후배 기자들이 분노의 모임을 가진 끝에 급기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격적으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사측은 기자노조의 중심 인물들을 해직 또는 정직시켰고 이에 반발해 다른 기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측이 역시 비슷한 강경조치로 맞대응하자 기자들은 다시 2차 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나는 기자와 같은 지식인들의 노조란 것이 생소했지만 회사측의 대책이 너무 일방적이며 강경했기에 후배들에게 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내 이름을 그 대책위원회에 넣어도 좋다고 했다. 두번째 대책위에는 내가 가장 선배였다. 신문사는 외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진데다가 사태가 안팎으로 확산되는 것이 두려워졌는지 노조는 인정하지 않되 기자들에 대한 처벌을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기자노조와 회사 관계는 이렇

게 해서 소강상태가 됐다.

언론자유운동이 터지다

1974년 초가을, 당시 기자협회장이 정부 부처의 대변인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임원들과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결국 대변인 자리도 포기하고 협회에서도 물러났다. 중요 신문사 기자들은 기협이 이런 사태에 빠진 것은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들이 협회에 냉담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협회장을 선출하자고 합의를 본 모양이었다. 동아일보사의 후배 기자들은 내게 와서 이런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내게 그 책임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기자협회 회원이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 성격과 구성을 잘 모를 뿐더러 그 큰 조직을 내가 지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 준 부탁도 간절했을 뿐 아니라 공적인 명분을 사양하고 현실참여를 거절한다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기자협회장 출마에 동의했고 말하자면 큰 신문사 기자들의 ‘공천’ 격이어서 단독 후보가 됐다. 그런데 신문사가 제동을 걸었다. 사원들의 대외 활동에는 회사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규를 내세워 기자의 기자협회장 취임을 대외활동으로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허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은, 지난 2월의 기자노조 결성에 경악한 신문사 발행인들이 기자협회 개편을 노조운동의 전초로 인식하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소문이 소문으로가 아니라 사실로서 판단됐기 때문이다. 나는 기자협회장 출마를 고집하며 송전호 당시 편집국장의 만류를 거절했고 결국 ‘무기정직’이란 처분을 당했다. 그 ‘정직’ 당한 처지에서 나는 기자협회 대의원 대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때가 10월 18일인가였고 며칠 후, 회장에 선출되기 전에 나도 그 모의에 참가했던 언론자유운동이 드디어 터졌다. 동아일보사에서 시작된 ‘10·24 언론자유선언’이 그것이었다. ●